

韓國의 經濟成長과 雇傭, 分配 및 厚生

李 重熙*

目 次

I. 序論	3. 經濟成長과 所得分配分
II. 成長과 雇傭	IV. 成長 및 分配와 厚生
1. 經濟成長의 雇傭創出 原理	1. 成長과 分配의 厚生效果
2. 雇傭創出 要因의 分解	2. 成長과 分配를 結合한 厚生增加率
3. 經濟成長의 雇傭創出力	V. 結論
III. 成長과 分配	1. 要約
1. 經濟成長과 絶對貧困	2. 政策的 示唆點
2. 經濟成長과 所得不平等	

序論

經濟成長은 언제 어디서나 ‘빛과 그림자’를 수반한다. 韓國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60년대 이후의 高度成長은 눈부신 빛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드리우고 있다.

즉, 韓國은 經濟成長이 加速化된 1963년부터 1988년까지의 26년간 9.0%의 高率成長을 이룩함으로써 雇傭의 획기적 증가와 失業 및 潛在失業의 격감, 所得 및 消費水準의 비약적 증가와 絶對貧困의 감축, 衛生 및 營養狀態의 개선과豫想壽命의 연장, 教育機會의 확대, 合理的 行動樣式의 生成 등과 같은 찬란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성공담은 오늘날 體制와 地域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膾炙되고 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뚜렷하듯이 高度成長에 수반된 副作用도 적지 않은 것이

* 商經大 經濟學科 講師(經濟學 博士)

사실이다. 예로서 계층·부문·지역간 經濟的 不平等의 심화, 勞動者 權益伸張의 부진, 產業公害와 環境污染, 民主的 政治發展의 지체, 각종 범죄와 사고 등 社會惡의 급증, 道德 및 倫理意識의 타락과 價值觀의 혼돈 등은 高度成長이 남긴 너무나도 어두운 그림자인 것이다.

이처럼 經濟成長은 다방면에 걸쳐 兩面的 効果를 미치기 때문에 그 成果에 대한 評價는 찬양 일색이거나 또는 비난 일변도로 흐르는 경향이 농후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가급적 中立的인 立場에서 韓國의 經濟成長이 雇傭, 分配, 厚生에 미친 効果를 개략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本序論에 이어 Ⅱ章에서는 成長과 雇傭, Ⅲ章에서는 成長과 分配, Ⅳ章에서는 成長·分配와 厚生의 關係에 대하여 理論과 韓國 現實을 고찰한 다음 Ⅴ章에서 이 글의 분석결과를 要約하고 몇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글의 重點은 Ⅱ章에 놓여질 것이다.

II. 成長과 雇傭

經濟成長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수반한다. 그런데 成長의 빛 가운데 가장 눈부시고 인상적인 빛은 雇傭創出이라 할 수 있다. 雇傭創出은 所得誘發을 농해 貧困縮小와 所得分配改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全般的인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등 物質的 豊饒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일 그 자체를 통하여 無氣力하고沈滯된 社會氣風을 一新하여 모든 個人과 社會組織에 活力과 希望을 불어넣음으로써 力動的인 社會霧圍氣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韓國의 經濟成長이 가져온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成果는 획기적인 雇傭創出에 있다고 보고 成長과 雇傭의 關係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產業聯關分析 理論을 기초로 하여 經濟成長의 雇傭創出 原理를 분석하고, 雇傭創出力を 雇傭彈性值 와 勞動係數 개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經濟成長의 雇傭創出 原理

經濟學에서 需要, 生產, 雇傭의 세 변수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이들 변수 사이의 因果關係에 대해서는 新古典學派와 케인스學派 사이에 견해가 대립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신고전학파의 生產理論에 의하면 생산물의 產出水準은 이용가능한 生產要素의 量과 技術水準이라는 供給側 要因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편의상 기술수준이 일정하다고 가정

하면 產出水準은 生產要素의 投入量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리고 산출된 生產物은 ‘세이의 法則’에 의해 전부 需要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수요수준은 산출수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곧 生產要素가 產出水準을 결정할 뿐이며 그 반대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케인스學派에서는 有效需要의 水準이 產出水準을 결정하며, 산출수준에 의하여 雇傭水準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케인스學派에서는 新古典學派와 正反對의 因果關係가 가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新古典學派에서는 雇傭→生産→需要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케인스學派에서는 需要→生産→雇傭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產業聯關表를 이용하여 最終需要의 生產誘發(또는 創出) 效果나 雇傭誘發(또는 創出) 效果 등을 분석하는 데는 케인스學派의 이론이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產業聯關分析에서 是 최종수요(또는 최종수요의 증가)가 外生變數로 취급되고 총산출이나 고용 등은 內生變數로 취급되고 있어 케인스學派의 이론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케인스學派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產業聯關分析의 基本原理를 이용하여
經濟成長의 雇傭創出原理를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생산물 1단위 생산에 直接的으로 투입된
노동량'으로 정의되는 勞動係數(labor coefficient)의 개념을 이용하면 總生產物의¹⁹ 產出額과
雇傭量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L =고용량 벡터, $(n \times 1)$ 열 벡터.

\hat{t} =노동계수 행렬, $(n \times n)$ 대각행렬,

\mathbf{X} =총생산물의 산출액 벡터, $(n \times 1)$ 열 벡터.

(2.1) 식은 총생산물의 산출과정에서 直接的으로 고용되는 노동량은 勞動係數 行列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最終生產物에 대한 需要(이하에서는 最終需要로 약칭한다)와 總生產物의 產出額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최종생산물 뿐만 아니라 중간 생산물도 포함된 개념이다

$$X = (I - A^d)^{-1} Y^d = R^d Y^d \quad \dots \dots \dots \quad (2.2)$$

여기서 $I =$ 단위 행렬, $(n \times n)$ 행렬,

$A^d =$ 국산품 투입 계수 행렬, $(n \times n)$ 행렬,

$Y^d =$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n \times 1)$ 열 벡터,

$R^d = (I - A^d)^{-1} =$ 생산유발계수 행렬, $(n \times n)$ 행렬.

(2.2)식은 外生變數인 最終需要가 주어졌을 때 그 최종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直接·間接으로 유발되는 총생산물의 산출액은 生產誘發係數 行列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2.2)식을 (2.1)식에 대입하면 雇傭量과 最終需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L = \hat{L}(I - A^d)^{-1} Y^d = \hat{L}R^d Y^d \quad \dots \dots \dots \quad (2.3)$$

(2.3)식에서 노동계수 행렬을 생산유발계수 행렬에 곱한 행렬, 즉 $\hat{L}(I - A^d)^{-1} = \hat{L}R^d$ 를 勞動誘發係數 行列이라고 한다. (2.3)식은 최종수요가 주어졌을 때 그 최종수요의 충족을 위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直接·間接으로 유발되는 總雇傭量은 勞動誘發係數 行列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最終需要 → 生產誘發 → 雇傭誘發의 관계를 나타내는 위의 식들은 모두 靜態的 概念이다. 따라서 위의 식들은 經濟成長의 雇傭創出 原理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 절의 목적에 맞도록 經濟成長(즉, 最終需要 增加) → 生產增加 → 雇傭創出(즉, 雇傭增加)의 관계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2.1)식을 差分(difference)의 형태로 바꿔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

$$\Delta L = \hat{L} \Delta X + \Delta \hat{L} X \quad \dots \dots \dots \quad (2.4)$$

다음의 (2.2)식을 差分 형태로 바꿔쓰면

$$\Delta X = R^d \Delta Y^d + \Delta R^d Y^d \quad \dots \dots \dots \quad (2.5)$$

가 되고, (2.5)식을 (2.4)식의 ΔX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Delta L = \hat{\ell} R^d \Delta Y^d + \hat{\ell} \Delta R^d Y^d + \Delta \hat{\ell} X \quad \dots \dots \dots \quad (2.6)$$

(2.6)식은 雇傭變化의 要因을 (i) 經濟成長(ΔY^d), (ii) 中간생산물의 투입계수 변화를 나타내는 生產誘發係數의 變化(ΔR^d), (iii) 勞動係數 變化($\Delta \hat{\ell}$)의 세가지로 分解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經濟成長의 雇傭創出 效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의 一定不變 假定(ceteris paribus), 구체적으로 投入係數와 勞動係數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도입하면 된다. 그러면 (2.6)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바꿔쓸 수 있다.

$$\Delta L = \hat{\ell} R^d \Delta Y^d \quad \dots \dots \dots \quad (2.7)$$

우리는 (2.7)식으로부터 最終需要의 增加, 즉 經濟成長이 이루어질 때 그 증가된 최종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한 總生產物의 產出增加 과정에서 直接·間接으로 새롭게 創出되는 雇傭量을 구할 수 있다.

2. 雇傭創出 要因의 分解

(1) 要因分解 方法

앞 절에서 고찰한(2.7)식은 投入係數와 勞動係數가 一定할 때 經濟成長에 의하여 창출된 雇傭量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입계수와 노동계수는 변화하므로 雇傭增加의 原因을 經濟成長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들 요인의 변화까지도 감안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雇傭創出 要因을 分解하는 일차적인 접근방법은 (2.4)식과 같이 (i) 總產出 變化와 (ii) 勞動係數 變化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 보다 좀 더 세분한방법은 (2.6)식과 같이 (i) 最終需要 變化, (ii) 投入係數 變化, (iii) 勞動係數 變化的 세가지 요인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들 방법보다 더욱 세분하는 방법은 (2.5)식의 總產出 變化(ΔX)를 國內需要變化, 輸出變化, 輸入代替, 投入係數 變化 등으로 세분한 다음, 그 分解式을 (2.4)식에 대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雇傭創出 要因은 다음 식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²⁾

2) (2.8)식과 같은 分解式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도출과정은 생략한다. 여기서는 S.W.Y. Kuo, *The Taiwan Economy in Transition*(Boulder, Colorado:Westview Press, 1983), pp. 142~148, 347~345의 기호와 표시 방법을 택하였다.

産業研究

$$\begin{aligned}
 \Delta L &= \hat{\ell} R_2^d \hat{U}_{c2} \Delta C && : 소비변화 \\
 &+ \hat{\ell} R_2^d \hat{U}_{l2} \Delta I && : 투자변화 \\
 &+ \hat{\ell} R_2^d \Delta E && : 수출변화 \\
 &+ \hat{\ell} R_2^d \Delta \hat{U}_c C_1 && : 소비재의 수입대체 \\
 &+ \hat{\ell} R_2^d \Delta \hat{U}_l I_1 && : 투자재의 수입대체 \\
 &+ \hat{\ell} R_2^d [\Delta U_{ll} a_{ll}] X_1 && : 중간재의 수입대체 \\
 &+ \hat{\ell} R_2^d [\Delta U_{ll2} \Delta a_{ll}] X_1 && : 투입계수 변화 \\
 &+ \Delta \hat{\ell} X && : 노동계수 변화
 \end{aligned} \quad \left. \begin{array}{l} : 소비변화 \\ : 투자변화 \\ : 수출변화 \\ : 소비재의 수입대체 \\ : 투자재의 수입대체 \\ : 중간재의 수입대체 \\ : 투입계수 변화 \\ : 노동계수 변화 \end{array} \right\} \text{국내수요 변화} \quad \left. \begin{array}{l} : 투자변화 \\ : 수입대체 \end{array} \right\} \text{수입대체} \quad \dots \dots \dots \quad (2.8)$$

여기서

하첨자 1=기준 연도,

하첨자 2=비교 연도,

$C=(\text{민간 및 정부의}) \text{소비수요 벡터}, (n \times 1) \text{열 벡터},$

$I=(\text{민간 및 정부의}) \text{투자수요 벡터}, (n \times 1) \text{열 벡터},$

$E=\text{수출 벡터}, (n \times 1) \text{열 벡터},$

$\hat{U}_c=(\text{총소비수요 중}) \text{국산품 소비수요 비율 행렬}, (n \times n) \text{대각행렬},$

$\hat{U}_l=(\text{총투자수요 중}) \text{국산품 투자수요 비율 행렬}, (n \times n) \text{대각행렬},$

$a_{ll}=\text{중간생산물의 투입계수},$

$U_{ll}=\text{중간생산물의 투입계수 중 국산투입계수의 비율},$

즉 $U_{ll}=a_{ll}/a_{ll}$.

(2) 韓國의 雇傭創出 要因

產業聯關表를 이용하여 韓國의 雇傭創出 要因을 분석한 연구로는 金大模,³⁾ 金鍾貴⁴⁾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중 前者는 經常價格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1966~75년중의 고용창출 요인을 분석한 것이며 後者は 不變價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75~85년중의 고용창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雇傭創出 要因을 분석하는 데는 不變價格 產業聯關表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後者の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韓國의 雇傭創出 要因을 살펴보기로 한다⁵⁾. <表 1>은 동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인데 우리는 이로 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1975~85년중의 韓國의 雇傭創出 規模는 2,122천명에 달하여 연평균 1.8%의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이를 期間別로 보면 70년대에 후반에 비해 80년대 전반의 고용창출 規模와 成長率이 크게 鈍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雇傭創出 要因을 보면 1975~85년중 國內需要는 242.1%, 輸出은 86.1%의 雇傭創出效果를 가져왔으나 勞動係數는 236.0%의 雇傭減少效果를 가져왔다. 그리고 輸入代替와 投入係數는 미미한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창출 요인을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전반의 두 期間別로 비교해 보기로 하자. 먼저 國內需要의 고용창출효과는 두 기간중에 거의 비슷하였으나 輸出의 고용창출효과는 80년대 전반에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勞動係數의 고용감소효과도 80년대 전반에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80년대 전반에는 70년대 후반에 비해 수출의 雇傭創出效果는 커지고 勞動係數의 雇傭減少效果는 더욱 두드러진 것이 期間別 要因 比較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勞動係數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압도적인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韓國經濟

3) 金大模, 「雇傭 및 賃金構造의 變化와 所得分配」,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 251~319.

4) 金鍾貴, 「不變產業聯關表에 의한 韓國經濟의 成長要因 分析」,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1989. 8), pp. 18~46.

5) 金鍾貴의 고용창출요인 분해식은 앞에서 본 (2.8)식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金鍾貴는 (2.8)식에서와 같이 비교연도의 生산유발계수행렬(R_2^d)를 사용한 식을 파세식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S.W.Y. Kuo(1983)는 (2.8)식에서 C_0 , I_0 , E_0 등 기준연도 수치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2.8)식과 같은 형태를 라스파이어스식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金鍾貴의 연구에서 파세식으로 계측한 결과는 앞의 (2.8)식의 방법으로 계측한 것이나 다름없다.

〈表 1〉韓國의 雇傭增加 規模와 要因, 1975~85

(단위: %)

구분	인원(명) 연 평 균 증 가 율	기간 1975~85		
			1975~80	1980~85
증가요인	국내수요증가	2,121,570	1,211,260	910,310
	수출증가	1.8	2.1	1.5
	수입대체	242.1	272.6	275.6
	(최종재)	86.1	88.2	111.2
	(중간재)	5.0	5.6	11.8
	투입계수변화	(7.7)	(5.0)	(12.7)
	노동계수변화	(- 2.7)	(0.6)	(-0.9)
		2.8	- 16.2	26.9
		-236.0	-250.2	-325.5

資料: 金鍾貴, 「不變產業聯關表에 의한 韓國經濟의 成長要因分析」,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1989. 8.), p. 42.

의 生產方式이 급속하게 勞動節約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80년대 전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資本·技術集約的 產業으로의 構造調整政策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構造調整政策은 產業構造의 高度化나 國際競爭力 強化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雇傭創出이란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이 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3. 經濟成長의 雇傭創出力

지금까지 우리는 經濟成長의 雇傭創出 原理와 要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는 한 經濟의 成長이 과연 어느 정도의 雇傭創出力を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雇傭彈性值와 勞動係數의 두 指標를 가지고 韓國의 經濟成長의 雇傭創出力を 고찰하기로 한다.

(1) 雇傭彈性值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은 흔히 雇傭彈性值로 측정되고 논의된다. 고용탄성치란 雇傭增加率

을 經濟成長率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경제가 1퍼센트 성장할 때 고용은 몇 퍼센트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雇傭彈性值의 測定에는 통상『經濟活動인구연보』상의 총취업자 증가율과 GNP나 GDP의 증가율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되는 고용탄성치는 한 國民經濟의 總體的인 雇傭創出力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의의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GNP는 ‘國民’ 개념인데 비해『經濟活動인구연보』상의 취업자는 ‘國內에 상주하는 內國人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인 經濟成長率과 분자인 雇傭增加率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GNP나 GDP에는 生產과 雇傭의 관계가 모호한 ‘정부서비스생산자’와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활동이 포함되고 있어 雇傭彈性值의 본래의 含意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고용탄성치의 본래적 함의는 利潤追求를 목적으로 한 生產活動과 雇傭간에 直接的이고 有機的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 『經濟活動인구연보』의 조사대상에서는 현역군인이나 전투경찰은 제외되고 있으나⁶⁾ GNP와 GDP에는 ‘정부서비스생산자’라는 항목에 이들의 활동이 포함되고 있어 분모와 분자의 자료상의 包括範圍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할 수 있는 方法은 GDP에서 ‘정부서비스생산자’와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활동을 제외한 개념인 ‘산업’(industries) 부분만을 生產活動 부문으로 간주하여 이 부문의 附加價值增加率을 經濟成長率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

그러면 다음에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韓國의 雇傭彈性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表2〉는 지난 25년간의 한국의 고용탄성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表3〉은 이를 몇 가지 期間別로 平均한 것이다. 이 두가지 表는 한국에서 이용가능한 가장 長期間의 雇傭彈性值를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부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 이외에도 다른 研究와의 比較나 다른 目的의 利用을 위해서 GNP나 GDP를 기준으로 한 雇傭彈性值도 계산해 두었다. 이들 表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1964~88년의 25년 동안 韓國의 雇傭은 연평균 3.3 %씩 증가하고 ‘산업’부가가치는

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8, p. 1.

7) ‘산업’부문의 정의와 포괄범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신국민계정해설』, 1986, pp. 23~24 참조.

〈表 2〉韓國의 雇傭·附加價值 增加率과 雇傭彈性值, 1964~88

(단위 : %)

구분 연도	고용 증가율 (A)	부가가치 증가율			고용 탄성치		
		GNP (B)	GDP (C)	'산업'부가가치 (D)	(E = $\frac{A}{B}$)	(F = $\frac{A}{C}$)	(G = $\frac{A}{D}$)
1964	1.8	9.6	9.7	10.7	0.19	0.19	0.17
65	5.4	5.8	5.7	6.1	0.93	0.95	0.89
66	2.6	12.7	12.2	13.1	0.20	0.21	0.20
67	3.6	6.6	5.9	6.0	0.55	0.61	0.60
68	5.1	11.3	11.3	12.1	0.45	0.45	0.42
69	2.5	13.8	13.8	14.9	0.18	0.18	0.17
1970	3.6	7.6	8.8	9.2	0.47	0.41	0.39
71	3.4	8.6	9.3	9.8	0.40	0.37	0.35
72	4.4	5.1	5.4	6.3	0.86	0.81	0.70
73	5.4	13.2	13.5	15.5	0.41	0.40	0.35
74	4.4	8.1	8.3	8.9	0.54	0.53	0.49
75	2.4	6.4	7.1	8.1	0.38	0.34	0.30
76	6.2	13.1	12.9	14.5	0.47	0.48	0.43
77	3.2	9.8	10.1	11.0	0.33	0.32	0.29
78	4.7	9.8	9.7	9.7	0.48	0.48	0.48
79	1.4	7.2	7.6	8.2	0.19	0.18	0.17
1980	0.6	-3.7	-2.2	-2.5	-0.16	-0.27	-0.24
81	2.5	5.9	6.7	7.2	0.42	0.37	0.35
82	2.5	7.2	7.3	8.0	0.35	0.34	0.31
83	0.9	12.6	11.8	12.9	0.07	0.08	0.07
84	-0.5	9.3	9.4	10.5	-0.05	-0.05	-0.05
85	3.7	7.0	6.9	7.8	0.53	0.54	0.47
86	3.6	12.9	12.4	13.2	0.28	0.29	0.27
87	5.5	12.8	11.8	12.4	0.43	0.47	0.44
88	3.2	12.2	11.3	11.8	0.26	0.28	0.27

資料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1988;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1984; 『1970~1988 國民計定』, 1989.

〈表 3〉 韓國의 期間別 平均 雇傭·附加價值 增加率과 雇傭彈性值
(단위 : %)

구분 기간	고 용 증가율 (A)	부 가 가 치 증 가 율			고 용 탄 성 치 ¹⁾		
		GNP (B)	GDP (C)	'산업'부가가치 (D)	(E= $\frac{A}{B}$)	(F= $\frac{A}{C}$)	(G= $\frac{A}{D}$)
1964~88	3.3	9.0	9.1	9.8	0.37	0.36	0.33
1964~69	3.5	10.0	9.8	10.5	0.42	0.43	0.41
1970~79	3.9	8.9	9.3	10.1	0.45	0.43	0.40
1980~88	2.4	8.5	8.4	9.8	0.24	0.23	0.21
1964~66	3.3	9.4	9.2	10.0	0.44	0.45	0.42
1967~71	3.6	9.6	9.8	10.4	0.41	0.40	0.39
1972~76	4.6	9.2	9.4	10.7	0.53	0.51	0.45
1977~81	2.5	5.8	6.4	6.7	0.25	0.22	0.21
1982~86	2.0	9.8	9.6	10.5	0.24	0.24	0.21
1987~88	4.4	12.5	11.6	12.1	0.35	0.38	0.36

註 : 1) 본표의 A~D열에 있는 기간별 평균치로부터 구한 것이 아니고 〈表 2〉에 있는 개별 연도의 고용탄성치를 해당기간별로 평균한 것임.

資料 : 〈表 2〉.

연평균 9.8 %씩 증가함으로써 雇傭彈性值는 0.33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의 '산업'부문 부가가치가 1% 성장함에 따라 총취업자는 0.33%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GNP 기준과 GDP기준으로 보면 前者は 0.37%, 後자는 0.36%로서 '산업'부문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1960년대(6년간), 1970년대, 1980년대(9년간)별로 보면 60년대와 70년대의 雇傭 및 經濟成長率과 雇傭彈性值가 모두 80년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經濟開發 5個年計劃 期間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雇傭은 제3차계획기간(1972~76)에 가장 높은 4.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제5차계획기간(1982~86)에 가장 낮은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기할 점은 제1차계획기간부터 제3차계획기간 까지는 雇傭이 加速的으로 增加하였으나 제4차~제5차 계획기간 중에는 增加率이

激減함으로써 1977~86년의 10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은 2.3%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雇傭增加率이 1977~86년중에 이처럼 鈍化된 이유는 아마도 이 기간중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重化學工業 育成政策과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제4차계획기간의 고용증가율 둔화현상은 동기간중의 경제성장을 둔화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제5차계획기간에는 경제성장률이 제1차~제3차계획기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음에도

〈表 4〉韓國의 産業別 勞動係數¹⁾, 1960~88

(단위: 명 / 10억원)

연도 산업	1960	1963	1970	1975	1980	1985
전 산 업	536.2	468.7	223.6	153.8	95.2	68.7
농 림 어 업	1,226.7	1,030.9	530.7	467.4	341.1	227.6
광 공 업	176.1	154.7	106.2	68.6	43.9	32.4
(광 업)	(173.0)	(138.9)	(138.2)	(127.9)	(116.1)	(105.7)
(제 조 업)	(178.0)	(164.1)	(107.9)	(66.8)	(42.6)	(31.4)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서 비 스 업	236.7	226.3	172.4	144.4	103.3	83.5
(전력·가스·수도·건설업)	(85.4)	(58.3)	(42.6)
(기타서비스업)	(158.3)	(116.4)	(97.2)

註 : 1) 노동자는 취업자 기준이며 산출액은 1985년 불변가격 기준임. 즉,

$$\text{노동계수} = \frac{\text{각 연도의 취업자 수}}{\text{각 연도의 1985년 불변가격 산출액}}$$

여기서 분모인 산출액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음. 먼저 1970~1985년의 산출액은 『1975~1980~1985年 接續不變産業聯關表(I)』의 1985년 불변가격 산출액을 이용하였음. 그리고 1960~1970년의 산출액은 각 연도 산업연관표의 경상가격 산출액을 국민소득통계에서 구한 부가가치 deflator로 换價하여 1985년 불변가격 산출액을 구하였음.

資料 : 韓國銀行, 『産業聯關表』, 각 연도; 『1975~1980~1985年 接續不變 産業聯關表(I)』, 1989; 「노동의 산업연관분석」, 『조사월보』, 1973, 11; 「勞動의 産業聯關分析」, 『조사월보』, 1975, 11; 『우리나라 労動聯關構造分析』, 『조사통계 월보』, 1988, 6; 『國民所得計定』, 1984; 『1970~1988 國民計定』, 1989.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은 제1차~제3차계획기간의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 기간중에集中的으로 실시된 資本·技術集約的 產業으로의 構造調整政策이 고용증가율을 크게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雇傭彈性值도 경제계획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제1차~제3차계획기간에 비해 제4차~제5차계획기간의 고용탄성치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労動係數

한 經濟의 雇傭創出力의 變化는 雇傭彈性值 이외에도 労動係數의 變化推移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계수는 생산물 1단위의 생산에 直接的으로 투입된 노동량으로 정의 되므로, 經濟成長 過程에서 労動係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그 경제의 고용창출력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表4〉는 產業聯關表를 이용하여 1960~88년 중의 韓國의 労動係數를 구한 것이다. 우리는 동표로 부터 한국의 모든 산업의 雇傭創出力이 지속적이고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成長과 分配

本章에서는所得分配에 대한 經濟成長의 여러 效果 중에서 絶對貧困, 相對的 不平等, 相對的所得分配分 등에 대한 效果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1. 經濟成長과 絶對貧困

(1) 經濟成長과 絶對貧困의 關係

貧困이라는 현상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으나¹⁾ 편의상 絶對貧困(absolute poverty) 개념에 의하여 정의·측정하면 經濟成長과 絶對貧困 사이에는 陰의 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절대빈곤은 경제성장에 의해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假說은 所得水準이 相異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國家間 橫斷面 分析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國家의 時系列 分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1) 貧困의 定義와 測定 방법에 대한概觀은拙稿, 「貧困의 定義 및 測定」, 洪起容 編著, 『都市貧困의 實態와 政策』(檀大出版部, 1986), pp. 22~37 참조.

예로서 마이너는²⁾ 1인당 GNP가 非絕對貧困 人口比率, 豫想壽命, 成人 文字解讀率 등과 陽의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해서 經濟成長이 低水準의 所得·健康·教育 등으로 정의·측정되는 絶對貧困과 陰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韓國의 絶對貧困

韓國에서의 絶對貧困에 관한 時系列 分析으로는 徐相穆,³⁾ 徐相穆 等⁴⁾, 徐相穆·延河請⁵⁾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를 연구에 의하면 韓國의 絶對貧困 人口比率은 1965년에 40.9%의 높은 수준에 달했으나 1976년에는 14.8%, 1980년에는 9.8%, 그리고 1984년에는 4.5%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여러가지 概念上·資料上의 問題點을 안고 있어 韓國의 絶對貧困 人口比率의 크기를 過少評價하고 있다는 批判이 있고⁶⁾ 또 그러한 비판의 상당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絶對貧困 人口比率이 高度成長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감소해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韓國의 貧困問題를 논의하면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최근의 한국의 빈곤문제가 絶對貧困 보다는 相對貧困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2. 經濟成長과 所得不平等

(1) 經濟成長과 所得不平等의 關係

經濟成長과 所得不平等의 關係는 쿠즈네츠 假說(Kuznets' hypothesis)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한 국가를 대상으로 階層別 所得占有率을 비교 분석한 쿠즈네츠의 선구적인 두 연구에서⁷⁾ 기원한 이 가설은 통상 經濟成長의 初期段階에서는 所得不

2) G.M. Meier,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5th ed.(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26~29.

3)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2號(韓國開發研究院, 1979), pp. 13~30.

4) 徐相穆 等,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81.

5) S. Suh and H. Yeon, "Social Welfare Dur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in Korea, *KDI Working Paper 8604*, 1986.

6) 李俊求, 『所得分配의 理論과 實際』(茶山出版社, 1989), pp. 339~361.

7) S. Kuznet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55, pp. 1~28;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I,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uary 1963, pp. 1~80.

平等度가 增加하고 그 후 一定期間은 安定된 추세를 보이다가 經濟成長의 後期段階에서는 減少한다는 要지의 가설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쿠즈네츠의 가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명한 發展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수많은 實證分析이 이루어져 왔는데⁸⁾ 그 중 多數의 研究에서 同 假說의 實證的 타당성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계속되는 다수의 실증분석에서 쿠즈네츠의 가설이 立證됨에 따라 이 가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事實 또는 命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假說은 급속한 經濟成長을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던 많은 發展途上國과 後進國에서 '成長과 分配' 또는 '效率과 衡平' 중 어느 것에 優先順位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政策論議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成長과 分配' 또는 '效率과 衡平'은 調和가 불가능하고 相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高度經濟成長을 추구하면 所得不平等이 深化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所得分配의 惡化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 經濟成長 과정에서 의 政府의 意圖의 衡平增進政策은 無力할 뿐만 아니라 所望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 衡平의 增進은 오로지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통하여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 先成長·後分配 政策이 성장과 분배의 同時追求 政策이나 先分配·後成長 政策보다 소망스럽다는 주장 등은 모두 명시적이건 암시적이건 쿠즈네츠 가설에 대한 實證分析 결과에서 얻어진 '成長과 分配의 相衝關係論'에 그 논리적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世界銀行과 英國 써섹스大學校 發展研究所의 共同研究報告書는⁹⁾ 經濟成長과 所得分配가 반드시 상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調和必要性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한 實證研究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연구와는 달리 成長과 分配간에 相衝關係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재원·구석모에¹⁰⁾의 하여 이루어진 이 研究는 선진국을 포함한 32개국의 1960년대와 1970년대 중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i) 所得水準과 所得平等度 사이의 長期的 相衝關係

8) 이에 관한 포괄적인 요약 및 정리는 다음을 참조. G.S. Field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 59~124.

9) H.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Oxford University Press, 1974).

10) J.W. Lee and S.M. Koo,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Equality," in *The Theory of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eds. Y.S. Brenner, J.P.G. Reijnders, and A.H.G.M. Spithoven(Sussex, U.K.: Wheatsheaf Books, 1988), pp. 155~177.

존재여부, (ii) 所得成長率과 所得平等度 사이의 短期的 相衝關係 존재여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所得水準과 所得平等度 사이의 長期的 相衝關係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所得成長率과 所得平等度 사이의 短期的 相衝關係는 총체적 척도인 지니係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所得階層別 所得占有率과 같은 부분적 척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實證分析 結果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 두 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經濟成長과 所得平等度는 상충이 불가피하다는 숙명론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政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衡平增進政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총체적 척도인 지니係數를 사용했을 경우 經濟成長率과 所得平等度 사이에 短期的 相衝關係가 존재하므로 정책당국자는 고도성장정책이 초래하는 所得分配에 대한 副作用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그 社會에서 수용가능한 경제성장을과 소득평등도 사이의 最適組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과 같은 國家間 橫斷面 資料를 토대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실은 李俊求 교수가 상세하고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¹¹⁾,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기초로 한 실증분석 결과가 한 國家의 時系列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와同一할 수 없으며 또한 發展途上國이 先進國과 동일한 發展經驗과 經路를 필연적으로 따른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韓國의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所得不平等度는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2) 韓國의 所得不平等度

〈表5〉는 1965~88년의 24년간에 걸친 韓國의 階層別 所得分配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同表의 資料는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연보’와 농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한 朱鶴中·尹珠賢의 推計와¹²⁾ 경제기획원이 실시하는 ‘社會統計調查’의 標本調查 結果의 두

11) 李俊求, *op. cit.*, 第6章.

12) 朱鶴中·尹珠賢, 「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1984년 봄호(韓國開發研究院, 1984), pp. 2~18.

〈表 5〉韓國의 階層別 所得分配, 1965~88

구분 연도	자료 출처	지니 계수	계층별 소득점유율(%)			10분위 분배율(%) ($\frac{A}{B} \times 100$)
			하위40% (A)	중위40%	상위20% (B)	
1965	주학중·윤주현(1984)	0.3439	19.34	38.85	41.81	46.3
1970	"	0.3322	19.63	38.75	41.62	37.2
1976	"	0.3908	16.85	37.81	45.34	37.2
1980	경제기획원(1987) ¹⁾	0.3891	16.06	38.55	45.39	35.4
1982	주학중·윤주현(1984)	0.3574	18.80	38.21	42.99	43.7
1985	경제기획원(1987) ¹⁾	0.3631	17.71	38.58	43.71	40.5
"	경제기획원(1989) ²⁾	0.3449	18.91	38.37	42.72	44.3
1988	경제기획원(1989) ²⁾	0.3355	19.68	38.08	42.24	46.6

註 : 1) 單獨家口가 포함된 것임.

2) 單獨家口가 제외된 것임.

資料 : 朱鶴中·尹珠賢, 「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1984년

봄호(韓國開發研究院, 1984.), pp. 2~18;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韓國의 社會指標』, 1987, 1989.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두 자료는 原資料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點으로 인하여 韓國의 所得分配 상태를 완벽하게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限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분배 상태가 지난 24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유추해보는 데는 나름대로의 價值와 有用性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表5〉에 의하면, 韓國의 階層別 所得分配 상태는 1976년과 1980년에 가장 惡化되었다가 그 후 점차 改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니係數로는 1976년이 0.3908로서 가장 악화되었고 10분위 분배율로는 1980년이 35.4%로서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 연도의 지니係數와 10분위 분배율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76년에 급격히 악화된 소득분배

〈表 6〉韓國의 家口別·地域別 지니계수, 1965~88

출처 구분 연도	주 학 중·윤 주 현					경 제 기 획 원		
	전가구	농 가	비농가	근로자	자영업자· 경영자	전 국	시 부	군 부
1965	0.3439	0.2852	0.4167	0.3993	0.3838	-	-	-
1970	0.3322	0.2945	0.3455	0.3043	0.3528	-	-	-
1976	0.3908	0.3273	0.4118	0.3553	0.4490	-	-	-
1980 ¹⁾	-	-	-	-	-	0.3891	0.4053	0.3555
1982	0.3574	0.3061	0.3705	0.3090	0.4446	-	-	-
1985 ¹⁾	-	-	-	-	-	0.3631	0.3846	0.3199
1985 ²⁾	-	-	-	-	-	0.3449	0.3694	0.2969
1988 ²⁾	-	-	-	-	-	0.3355	0.3496	0.2895

註 : 1) 단독가구가 포함된 것임.

2) 단독가구가 제외된 것임.

資料 : 〈表 5〉와 동일함.

상태가 1980년에도 거의 그대로 지속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982년 이후로는 지니係數와 10분위 분배율 모두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한편 同期間中 韓國의 家口別·地域別 所得分配 상태의 변화추이는 〈表6〉에서 보는 바와 같다. 同表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의 널리 알려진 사실, 즉 (i) 家口別 所得分配의 경우 農家에 비해 非農家가 훨씬 不平等하고, 비농가중에서는 근로자가구보다 自營業者 및 經營者가 훨씬 불평등하다는 사실과 (ii) 地域別 所得分配의 경우 郡部에 비해 市部가 훨씬 不平等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3) 이러한 해석은 〈表5〉에서 주 학 중·윤 주 현(1984)의 1982년 추계자료를 단독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제기획원(1989)의 1985년 추계자료와 비교한 데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만일 단독가구가 포함된 경제기획원(1987)의 1985년 추계자료와 비교하면 1982~85년중에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表5〉에서 1985~88년중에는 어느 자료와 비교하든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經濟成長과 所得分配分

(1) 經濟成長과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關係

資本主義 經濟는 產業革命 이래로 수많은 景氣浮沈을 겪었으며 1930년대에는 大恐慌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長期的으로 보면 역시 成長·發展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長期的인 經濟成長 과정에서 相對的 所得分配分(relative income share)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리카도(D. Ricardo)의 선구적인 연구 아래로 줄곧 經濟學者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決定要因과 長期的 變化傾向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세히 고찰한 바 있으므로¹⁴⁾ 여기서는 相對的 勞動所得分配分의 長期的 變化傾向에 관한 주요 學派(또는 學者)의 見解를 간단히 要約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브론펜브레너에¹⁵⁾ 의하면 古典學派는 經濟成長의 결과 勞動所得分配分이 低下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으며, 新古典學派는 一定·不變 또는 매우 安定的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쿠즈네츠의¹⁶⁾ 연구는 經濟成長이 勞動所得分配를 고전학파의 생각처럼 일방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신고전학파의 생각처럼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經濟成長의段階에 따라 相異한 影響을 미친다는 假說을 제시해 주었다. 즉, 널리 알려진 쿠즈네츠의 가설은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측면에서 볼 때 經濟成長의 初期段階에서는 勞動所得分配分이 減少하지만 後期段階에서는 增加한다는 가설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분야의 권위자인 킹과 레간은¹⁷⁾ 최근의 논문에서 新古典學派, 後케인스學派, 그리고 마르크스學派의 견해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新古典學派 理論에 의하면 完全競爭의 단일 企業이나 部門의 경우에는 生產函數, 代替彈力性, 限界生產性原理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勞動所得分配分의 장기적 变화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賃金率이 相對的으로 上昇할 경우 勞動所得分配分은 $\sigma > 1$ 이면

14) 이에 관해서는拙稿「相對的 所得分配分의 決定과 變化에 관한 研究: 産業組織側面에서의 分析을 中心으로」, 經濟學 博士學位 論文(檀國大學校 大學院, 1987); 拙著,『相對的 所得分配分의 理論과 實際』, 每經新書, 18(每日經濟新聞社, 1988); 拙稿,『韓國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 行態 및 原因分析』,『勞動經濟論集』, 第11卷(韓國勞動經濟學會, 1988. 12), pp. 57~92 참조.

15) M. Bronfenbrenner, *Income Distribution Theory*(Chicago:Aldine, 1971), pp. 87~91.

16) S. Kuznets, *op. cit.*

17) J.E. King and P. Regan, "Recent Trends in Labour's Share," in *The Theory of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eds. T.S. Brenner, J.P.G. Reijnders, and A.H.G.M. Spithoven(Sussex, U.K.:Wheatsheaf Books, 1988), pp. 5 4~86.

감소하고 $\sigma < 1$ 이면 증가하며 $\sigma = 1$ 이면 변화하지 않는다¹⁸⁾.

그러나 經濟全體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은 확실한 예측의 論理的基礎가 희박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集計生產函數(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傾向을豫測한다면 長期的으로는 安定的이고 短期的으로는 反景氣的으로(counter-cyclically) 움직인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음 後케인스學派理論(Post-Keynesian theory)에 의하면 勞動所得分配分은 需要不足으로 인하여 景氣的失業 또는 케인스의 失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우 安定的이며, 完全雇傭이 달성되어 供給側面의 制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끝으로 마르크스主義理論(Marxian theory)에 의하면 勞動所得分配分의 長期的 變化傾向에 대한 합치된 견해가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勞動所得分配分은 마르크스의 이론의 摧取率(rate of exploitation) 또는 剩餘價值率(rate of surplus value)의 減少函數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잉여가치율의 장기적 변화경향에 대해서 마르크스 자신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主義 경제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2) 韓國의 相對的 労動所得分配分

勞動所得分配分은 구체적으로 (i) 要素費用 國民所得에 대한 被庸者報酬의 比率과 (ii) 國內要素所得에 대한 國內被庸者報酬의 比率의 두 가지로 정의·측정될 수 있다. 이중 前者は '國民勞動所得分配分'으로, 後자는 '國內勞動所得分配分'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表7〉은 1953~88년의 韓國의 労動所得分配分을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다. 同表로부터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50년대와 60년대 중에 30% 내외의 수준에 머물렀던 國民勞動所得分配分이 70년대 중에는 40% 내외의 수준으로 높아졌고 80년대에는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國民勞動所得分配分은 國내勞動所得分配分보다 대략 1~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勞動所得分配分의 이러한 增加現象은 產業構造 變化的 側面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1970~85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研究에서의 分析結果에 의하면¹⁹⁾ 韓國 '산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의 總增加效果 중에서 59.9%는 產業內效果(즉, 勞動所得分配分 自體의 變化에 의한 效果)

18) 이 경우 대체탄력성(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igma = \frac{(K/L)\text{의 변화율}}{(w/r)\text{의 변화율}}$$

여기서 K, L, w, r 은 각각 자본, 노동, 임금율, 이자율을 나타낸다..

19) 李重熙, *op. cit.*

韓國의 經濟成長과 雇傭, 分配 및 厚生

〈表 7〉 韓國의 勞動所得分配分, 1953~88

(단위 : %)

구분 연도	국 민 노동소득분배분 ¹⁾	국 내 노동소득분배분 ²⁾	구분 연도	국 민 노동소득분배분 ¹⁾	국 내 노동소득분배분 ²⁾
1953	25.8	..	1971	41.1	40.0
1954	31.4	..	1972	40.5	39.1
1955	30.1	..	1973	40.9	39.9
1956	28.6	..	1974	39.2	38.2
1957	30.3	..	1975	40.4	39.0
1958	34.1	..	1976	41.8	40.7
1959	38.6	..	1977	44.0	42.8
1960	37.4	..	1978	46.3	45.2
1961	34.5	..	1979	48.8	47.4
1962	36.1	..	1980	51.9	49.4
1963	30.7	..	1981	51.6	48.6
1964	28.1	..	1982	52.7	49.5
1965	31.8	..	1983	54.0	51.2
1966	33.0	..	1984	53.5	50.6
1967	36.7	..	1985	53.2	50.3
1968	37.5	..	1986	51.9	49.4
1969	38.7	..	1987	52.7	50.8
1970	41.0	40.0	1988	52.4	51.1

註 : 1) 피용자보수/ 요소비용 국민소득

2) 국내 피용자보수/국내 요소소득

資料 : 韓國銀行, 『1970~1988 國民計定』, 1989.

에 기인하였으며, 40.1%는 產業間效果(즉, 產業構成의 變化에 의한 效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분 변화의 主要原因은 產業內效果에 있었다는 의미 한다. 그러나 產業間效果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勞動所得分配分의 增加가 전적으로 非勞動所得分配分의 脱生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労動所得分配分의 增加現象은 ‘파용자/취업자 비율’의 변화와 ‘임금/소득 비율’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1970~85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²⁰⁾ 國內勞動所得分配分의 增加는 거의 전적으로 被庸者數의 相對的 增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임금/소득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부터 우리는 労動所得分配分이 增加했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被庸者들의 相對的 地位가 改善되었다거나 또는 非勞動所得分配分으로 부터 勞動所得分配分으로의 ‘순수한’ 分配上의 移動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成長 및 分配와 厚生

本章에서는 經濟成長과 所得分配가 社會厚生에 미치는 效果에 대한 價值判斷 方法을 厚生經濟學的 관점에서 고찰한 다음 經濟成長率의 代案으로 제시된 厚生增加率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成長과 分配의 厚生效果

일정 시점에서의 한 經濟의 社會厚生(social welfare)은 그 경제의 所得水準과 所得分配의 函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한 經濟의 사회 厚生의 變化는 所得水準 變化와 所得分配 變化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所得水準의 變化는 經濟成長의 有無에 의하여 일어난다. 즉, 소득수준의 증가(감소)는 경제성장(貧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經濟成長은 통상 經濟全體의 實質所得의 增加나 또는 1인당 實質所得의 增加로 측정된다.

한편 經濟成長에 의하여 所得水準이 增加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所得分配도 變化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소득분배는 改善될 수 있고 惡化될 수도 있다. 물론 소득분배가 변화하지 않는 경제성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經濟成長 과정에서 발생하는 所得分配의 變化상태에 따라 經濟成長의 類型을 (i) 分配 惡化型 成長(growth-cum-deteriorating distribution), (ii) 分配 改善型 成長(growth-cum-improving distribution), (iii) 分配 不變型 成長(growth-cum-constant distribution)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0) Ibid.

韓國의 經濟成長과 雇傭, 分配 및 厚生

이제 이 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社會厚生函數를 經濟成長과 所得分配 狀態의 函數로 나타내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편의상 所得水準을 Y , 所得分配를 D 라고 하면 社會厚生函數(W)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4.1)식에서所得水準이增加하면社會厚生은增加한다고 볼 수 있다($\partial W/\partial Y > 0$). 그러나所得分配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관점에서 측정·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厚生에 미치는 효과를一義的으로 말할 수 없다.

만일 労動所得分配를 相對的 不平等(relative inequality; I)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면 所得分配의 改善은 다음의 (4.2.a)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絶對貧困(P)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면 다음의 (4.2.b)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고, 相對的 不平等과 絶對貧困의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면 다음의 (4.2.c)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4.2)식을 (4.1)식의 D 에 대입하면 社會厚生函數는所得分配를 評價하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W = W(Y, I) \quad ; \quad \frac{\partial W}{\partial Y} > 0, \quad \frac{\partial W}{\partial I} < 0 \quad \dots \dots \dots \quad (4.3.a)$$

1)以下の論文はG.S. Field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 33~58を基準とした 것이다。

(4.3.a)식은所得分配를 오로지相對的不平等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방법으로서社會厚生은所得水準의增加函數임과 동시에所得不平等度의減少函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3.b)식은所得分配를絕對貧困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방법으로서社會厚生은所得水準의增加函數임과 동시에絕對貧困의減少函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이接近方法에의할 경우絕對貧困만 감소되면-비록相對的不平等이增加한다고 하더라도-所得分配는改善되어社會厚生이增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끝으로(4.3.c)식은所得分配를相對的不平等과絕對貧困의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서社會厚生은所得水準의增加函數임과 동시에相對的不平等과絕對貧困의減少函數라는 것이다. 따라서이방법에의할 경우不平等이 일정할 때絕對貧困이 감소되거나 또는絕對貧困이 일정할 때不平等이 감소하면所得分配는改善되어社會厚生이增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의 논의는二重構造經濟에서의成長과分配의厚生效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변형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下添序 t 와 m 을각각傳統部門(traditional sector)과近代部門(modern sector)을나타낸다고하자. 그러면總所得,相對的不平等,絕對貧困은각각다음과같이쓸 수 있다.

$$Y = Y_t + Y_m = w_t f_t + w_m f_m ; \frac{\partial Y}{\partial w_t} > 0, \frac{\partial Y}{\partial f_t} > 0, \frac{\partial Y}{\partial w_m} > 0, \frac{\partial Y}{\partial f_m} > 0 \dots \dots \dots \quad (4.4.a)$$

$$I = I(w_t, f_t; w_m, f_m) ; \frac{\partial I}{\partial w_t} < 0, \frac{\partial I}{\partial f_t} \geq 0, \frac{\partial I}{\partial w_m} > 0, \frac{\partial I}{\partial f_m} \leq 0 \dots \dots \dots \quad (4.4.b)$$

$$P = P(w_t, f_t) ; \frac{\partial P}{\partial w_t} < 0, \frac{\partial P}{\partial f_t} > 0, \dots \dots \dots \quad (4.4.c)$$

위식에서 w 는賃金率을나타내며 f 는각부문의就業者比重을나타낸다.

이제위의식들을이용하면二重經濟에서의成長과雇傭이厚生에미치는效果를평가할수있게된다. 즉, 예로서所得分配를相對的不平等과絕對貧困의두가지관점에서평가하는경우에는다음식과같이나타낼수있다.

$$W = W(Y, I, P) \dots \dots \dots \quad (4.5)$$

$$= W [w_t f_t + w_m f_m, I(w_t, f_t, w_m, f_m), P(w_t, f_t)] ;$$

$$\begin{aligned}\frac{\partial W}{\partial Y} &> 0, \frac{\partial Y}{\partial w_t} > 0, \frac{\partial Y}{\partial f_t} > 0, \frac{\partial Y}{\partial w_m} > 0, \frac{\partial Y}{\partial f_m} > 0, \\ \frac{\partial W}{\partial I} &< 0, \frac{\partial I}{\partial w_t} < 0, \frac{\partial I}{\partial f_t} \geq 0, \frac{\partial I}{\partial w_m} > 0, \frac{\partial I}{\partial f_m} \leq 0, \\ \frac{\partial W}{\partial P} &< 0, \frac{\partial P}{\partial w_t} < 0, \frac{\partial P}{\partial f_t} > 0.\end{aligned}$$

2. 成長과 分配를 結合한 厚生增加率

(1) 알루왈리아-체너리의 厚生增加率

알루왈리아와 체너리는²⁾所得分配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있는 經濟成長率을 厚生增加率로 간주하는 데 따르는 문제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成長과 分配를 結合한 厚生增加率 测定 方法을 제안한 바 있다³⁾.

階層別 所得增加率을 g_i 로 놓고 階層別 加重值를 w_i 로 놓으면 經濟全體의 厚生增加率(G)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G = w_1g_1 + w_2g_2 + \dots + w_ng_n \quad \dots \quad (4.6)$$

所得階層을 편의상 低·中·高所得層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을 각각 하첨자 1, 2, 3으로 나타내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G = w_1g_1 + w_2g_2 + w_3g_3 \quad \dots \quad (4.7)$$

그런데 위의 두 식에서 G 는 어떤 加重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알루왈리아와 체너리는 GNP加重值, 均等加重值, 貧困加重值의 세 가지 가중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GNP加重值(GNP weight)를 사용하는 방법은 階層別 所得占有比重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均等加重值(equal weight)를 사용하는 방법은 階層別 人口比重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貧困加重值(poverty weight) 사용방법은 가난한 계층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중 GNP加重值 사용방법은 사실상 GNP成長率을 厚生增加率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한

2) M.S. Ahluwalia and H. Chenery, "The Economic Framework," in *Redistribution with Growth*, eds. H. Chenery et al.(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 38~51.

3) 이러한 방법의 意義와 限界에 대해서는 G.S. Fields, *op. cit.*, pp. 175~176 참조.

방법으로서 소득점유비중이 높은 高所得層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低所得層에게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衡平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均等加重值 사용방법은 所得水準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同一한加重值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하면 低所得層 40%와 中所得層 40%에게는 각각 0.4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高所得層 20%에게는 0.2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貧困加重值는 빈곤계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루왈리아와 체너리는 低所得層(下位 40%)에게 0.6을, 中所得層(中位 40%)에게 0.3을, 高所得層(上位 20%)에게 0.1의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加重方法을 이른바 '所得의 限界效用'(marginal utility of income) 관점에서 해석하면 GNP加重值, 均等加重值, 貧困加重值 사용방법은 각각 所得의 限界效用이 체증, 일정불변, 체감한다는 가정을 채택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상의 세 가지 加重方法을 사용하여 韓國의 厚生增加率을 計測해 보기로 하자.

(2) 韓國의 成長·分配와 厚生增加率

〈表8〉은 1966~87년의 22년간의 韓國의 階層別 個人可處分所得 增加率을 推計한 것이다. 同表에 의하면 韓國 全體의 個人可處分所得은 연평균 10.6%씩 성장하였으며 所得階層別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期間別로 나누어 보면 특이한 현상이 발견된다. 즉, 1966~76년의 11년간에는 高所得層일수록 더 높은 所得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나 1977~87년의 11년간에는 低所得層일수록 더 높은 所得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러한 階層別 所得增加率과 세 가지 加重值을 사용하여 계산한 厚生增加率을 보기로 하자⁴⁾. 〈表9〉에 의하면 1966~87년중 厚生增加率은 어느 加重值을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10.6%로서 個人可處分所得 增加率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厚生增加率도 期間別로 보면 특이한 현상이 발견된다. 즉, 1966~76년 중에는 個人可處分所得 增加率(또는 所得占有率을 사용한 厚生增加率)은 9.8%이지만 均等加重值와 貧困加重值를 사용한 厚生增加率은 각각 9.4%, 9.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단순한 所得增加率

4) 알루왈리아와 체너리는 계층별 소득점유율을 GNP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여기서와 같이 개인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소득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表 8〉韓國의 階層別 個人可處分所得 增加率, 1965~87

구분	연도	1965	1976	1987
소비자 물가지수(1985 =100) (A)		8.9	37.0	105.9
개인가처분소득 (10억원) $(C = \frac{B}{A} \times 100)$	경상가격 1985년 불변가격	672.96 7,561.3	7,848.5 21,212.2	73,581.9 69,482.4
계 총 별 소득점유비중 (D)	하위 40% 중위 40% 상위 20% 계	0.1934 0.3885 0.4181 1.0000	0.1685 0.3781 0.4534 1.0000	0.1968 ²⁾ 0.3808 ²⁾ 0.4224 ²⁾ 1.0000
계 총 별 개인가처분소득 (10억원) (E=C×D)	하위 40% 중위 40% 상위 20% 계	1,462.3 2,937.6 3,161.4 7,561.3	3,574.3 8,020.3 9,617.6 21,212.2	13,674.1 26,458.9 29,349.4 69,482.4
계 총 별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 ¹⁾ (%)	기간	1966~87	1966~76	1977~87
하위 40%	10.7	8.5	13.0	
중위 40%	10.5	9.6	11.5	
상위 20%	10.7	10.6	10.7	
계	10.6	9.8	11.4	

註 : 1)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간의 연간 복리성장을로서 (E)에 추계된 소득계층별 개인가처분소득
으로부터 계산한 것임.

2) 1988년의 계층별 소득점유 비중임.

資料 :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9; 개인가처분소득 자료는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1984, p. 159 및 韓國銀行, 『1970~1988 國民計定』, 1989, pp. 205~207; 계층별 소득점유비중 자료는 〈表 5〉.

〈表9〉韓國의成長・分配와 厚生增加率, 1966~87

기간	구분	계층		하위 40%	중위 40%	상위 20%	계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					
1966~87	가증치 ¹⁾	소득점유율가증치	10.7	10.5	10.7	10.6	
		균등가증치	0.1951	0.3847	0.4202	1.0	
		빈곤가증치	0.4	0.4	0.2	1.0	
	후생증가율(%)	소득점유율가증치	0.6	0.3	0.1	1.0	
		균등가증치	2.1	4.0	4.5	10.6	
		빈곤가증치	4.3	4.2	2.1	10.6	
	66~76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	6.4	3.1	1.1	10.6	
		가증치 ¹⁾	8.5	9.6	10.6	9.8	
		소득점유율가증치	0.1810	0.3833	0.4357	1.0	
		균등가증치	0.4	0.4	0.2	1.0	
		빈곤가증치	0.6	0.3	0.1	1.0	
		후생증가율(%)	1.5	3.7	4.6	9.8	
		소득점유율가증치	3.4	3.9	2.1	9.4	
		균등가증치	5.1	2.9	1.0	9.0	
		빈곤가증치	13.0	11.5	10.7	11.4	
77~87	가증치 ¹⁾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	0.1827	0.3794	0.4379	1.0	
		소득점유율가증치	0.4	0.4	0.2	1.0	
		균등가증치	0.6	0.3	0.1	1.0	
	후생증가율(%)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	2.4	4.3	4.7	11.4	
		소득점유율가증치	5.2	4.6	2.1	11.9	
		균등가증치	7.8	3.4	1.1	12.3	
		빈곤가증치					

註: 1) 소득점유율 가증치는 〈表8〉의 소득계층별 소득점유비중으로서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평균치임. 균등가증치는 소득계층별 인구비중임. 그리고 빈곤가증치는 Ahluwalia and Chenery (1974, p. 42)가 사용한 임의의 기준임.

資料: 〈表8〉

을 가지고 厚生增加의 尺度로 삼는 경우 다른 기준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厚生增加를 過大評價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7~87년 중에는 1966~76년과는 正反對로 均等加重值나 貧困加重值를 사용하여 계측한 厚生增加率이 所得占有率을 사용하여 계측한 것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단순한 個人可處分所得 增加率은 이 기간중의 厚生增加率을 過小評價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韓國의 成長과 分配의 厚生效果에 대한 本章의 分析은 극히 部分的이기 때문에 厚生에 대한 確定的인 결론은 유보하고 보다 상세한 분석은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V. 結論

本章에서는 이 글의 理論的·實證的 分析結果를 要約하고 몇 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기로 한다.

1. 要約

- 1) 需要-生產-雇傭의 세 變數間의 因果關係에 대해 新古典學派는 고용→ 生산→ 수요의 관계를, 케인스學派는 수요→ 生산→ 고용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產業聯關表를 이용하여 經濟成長의 雇傭創出 效果와 要因을 분석하는 데는 케인스學派의 因果關係가 想定된다.
- 2) 不變產業聯關表를 이용하여 1975~85년중의 韓國의 雇傭創出 要因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雇傭創出 規模와 成長率이 70년대 후반에 비해 80년대 전반에 크게 둔화되었고 둘째, 雇傭創出은 國內需要와 輸出의 增加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세째, 勞動係數 變化의 雇傭減少效果가 대단히 커으며 80년대 전반에 더욱 加速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經濟成長의 雇傭創出力은 雇傭彈性值나 勞動係數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雇傭彈性值은 통상 GNP나 GDP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으나 이 보다는 신국민계정상 '산업'부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인다. 1964~88년중 韓國의 雇傭彈性值를 산업부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0.33으로 타나났는데, 이를 期間別로 보면 제4차~제5차 경제계획기간(1977~86)중에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同期間中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重化學工業 育成政策과 產業構造調整政策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勞動係數도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韓國經濟의 雇傭創出力이 날이 갈수록

低下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經濟成長과 絶對貧困 사이에는 陰의 關係가 존재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韓國의 絶對貧困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絶對貧困率이 1965년의 40.9%에서 20년 후인 1984년에는 약 10분의 1 수준인 4.5%로 격감하였다. 이러한 研究에 대해서는 절대빈곤 水準이 크게 過小評價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있고 또 그러한 비판의 상당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빈곤의 減縮趨勢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 速度만큼은 경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急速한 絶對貧困 減縮의 가장 주된 要因은 고도성장에 따른 雇傭擴大인 것으로 보인다.

5) 經濟成長과 絶對貧困의 關係는 통상 쿠즈네츠 假說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 假說에 대한 기존의 수많은 實證分析 結果는 주로 '成長과 分配' 또는 '効率과 衡平'간에 相衝關係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인식되었고 많은 發展途上國과 後進國에서 先成長·後分配政策의 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英國 써쎄스大學校의 共同研究報告書나 이재원·구석모의 최근 實證研究는 '成長과 分配' 또는 '効率과 衡平의 調和 可能性과 必要性을 보여주고 있다.

6) 1965~88년중의 韓國의 所得不平等度에 관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1976년과 1980년 사이에 불평등이 가장 심화되었다가 1982~88년중에는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家口別로는 농가보다는 비농가가, 비농가 중에서는 근로자가구보다 자영업자 및 경영자가구가 훨씬 불평등하며, 地域別로는 群部에 비해 市部가 훨씬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經濟成長의 결과 勞動所得分配分이 長期的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見解는 學派別로 相異하다. 즉, 古典學派는 減少를, 新古典學派는 安定 또는 一定不變을 예측하고 있으며, 後케인스學派는 不況時의 安定과 好況時의 變動을 예측하고 있고, 마르크스主義學派에서는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8) 1953~88년중의 韓國 勞動所得分配分의 變化傾向을 보면 50~60년대 중에는 30% 내외 수준에 머물렀으나 70년대에는 40% 내외로, 그리고 80년대에는 50% 내외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효과를 產業構造와 就業構造 變化的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1970~85년중 韓國 '產業'部門의 勞動所得分配分 증가효과 중에서 59.9%는 產業內效果(즉, 노동소득분배분 자체의 변화에 의한 효과)에 기인하였으며 40.1%는 產業間效果(즉, 산업구성의 변화에 의한 효과)에 기인하였다.

둘째, 1970~85년 중 國內勞動所得分配分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被庸者數의 相對的 增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華폐적 측면에서 勞動者의 相對的 地位 改善이나 '순수한' 分配上의 移動의 指標로 볼 수 있는 '賃金/所得 比率'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 社會厚生은 所得水準과 所得分配의 합수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후생은 所得水準 또는 所得水準의 增加로 정의되는 經濟成長의 增加函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所得分配 狀態는 絶對貧困이나 相對的 不平等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고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하여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一義的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社會厚生을 所得水準과 所得分配의 합수로 정의할 때는 所得水準(또는 經濟成長)과 所得分配 狀態에 대한 價值判斷을 분명히 明示할 필요가 있다.

10) 알루왈리아와 체너리는 經濟成長率을 厚生增加率로 간주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成長과 分配를 結合한 厚生增加率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이 제안한 방법에 의하여 1966~87년 중 韓國의 厚生增加率을 計測한 결과 個人可處分所得 增加率이 均等加重值나 貧困加重值를 사용하여 구한 厚生增加率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同期間中 계층별 소득증가율이 類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期間別로 보면 1966~76년 중에는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이 후생증가율을 過大評價한 반면 1977~87년 중에는 過小評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政策的 示唆點

본 연구에서 얻은 두 가지 중요한 政策的 示唆點은 다음과 같다.

1) 韓國經濟의 雇傭創出力이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이고 급속하게 低下되고 있는 현상은 결코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며 政策的 對應이 시급히 요청되는 긴요한 문제이다. 政策當局은 현재 추진중인 資本·技術集約的 產業위주로의 構造調整政策의 方向·內容·速度를 雇傭政策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고용창출력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成長과 分配' 또는 '効率과 衡平'은 결코 相衝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調和가 可能하며 또 必要하다는 것이 최근의 유력한 견해이다. 따라서 政府는 마땅히 衡平增進을 위한 經濟改革政策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韓國經濟의 長期的이고 安定的인 成長을 확보하는 유일한 첨경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I. 統計資料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1988.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7, 1989.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9.
- _____. 『國民所得計定』. 1984.
- _____. 『1970~1988 國民計定』. 1989.
- _____. 『產業聯關表』. 각 연도.
- _____. 『1975~1980~1985年 接續不變產業聯關表(I)』. 1989.

II. 論文 및 著書

- 姜光夏. 『產業聯關分析論』. 比峰出版社, 1985.
- 金大模. 「雇傭 및 賃金構造의 變化와 所得分配」.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 金鍾貴. 「不變產業聯關表에 의한 韓國經濟의 成長要因分析」.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1989. 8) : 18~46.
- 邊衡尹 編著. 『韓國經濟論』, 改訂版. 裕豐出版社, 1989.
-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2號(韓國開發研究院, 1979) : 13~30.
- 徐相穆 等.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81.
- 李延雨. 「所得分配」. 邊衡尹 編著, 『韓國經濟論』, 改訂版, 裕豐出版社, 1989.
- 李俊求. 『所得分配의 理論과 現實』. 茶山出版社, 1989.
- 李重熙. 「貧困의 定義 및 測定」. 洪起容 編著, 『都市貧困의 實態와 政策』, 檀國大 出版部, 1986.
- _____. 「相對的 所得分配分의 決定과 變化에 관한 研究: 產業組織 側面에서의 分析을 中心으로」. 經濟學 博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1987.

- _____.『相對的所得分配分의理論과 實際』. 每日經濟新聞社, 1988.
- _____.「韓國勞動所得分配分의變化行態 및 原因分析」.『勞動經濟論集』, 第11卷(韓國勞動經濟學會, 1988) : 57~92.
- 趙淳.「韓國에 있어서의 衡平의 諸問題」.『經濟學研究』, 第37輯 第1號(韓國經濟學會, 1989. 12) : 131~144.
- 朱鶴中編.『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 朱鶴中.「韓國의 經濟發展과 均衡發展의 問題(2): 所得分配問題를 中心으로」.『經濟學研究』, 第32輯(韓國經濟學會, 1985. 2) : 285~297.
- _____.『成長과 分配: 그 理論과 現實의 한 考察』.『經濟學研究』, 第37輯 第1號(韓國經濟學會, 1989. 12) : 169~181.
- 朱鶴中·尹珠賢.「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韓國開發研究』, 1984년 봄호(韓國開發研究院, 1984) : 2~18.
-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 해설』. 1987.
- _____.『신국민계정 해설』. 1986.
- _____.「노동의 산업연관분석」.『조사월보』(1973. 11) : 17~31.
- _____.『勞動의 產業聯關分析』.『조사월보』(1975. 11) : 39~67.
- _____.「우리나라 労動聯關構造分析」.『조사통계월보』(1988. 6) : 26~54.

- Ahluwalia, M.S. and Chenery, H. "The Economic Framework." In *Redistribution with Growth*, eds. H. Chenery et al.,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Brenner, Y.S., Reijnders, J.P.G., and Spithoven, A.H.G.M. (eds.) *The Theory of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Sussex, U.K.:Wheatsheaf Books, 1988.
- Bronfenbrenner, M. *Income Distribution Theory*. Chicago:Aldine, 1971.
- Chenery, H. *Interindustry Economics*. New York:John Wiley & Sons, 1959.
- Fields, G.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King, J.E. and Regan, P. "Recent Trends in Labours, Share." In *The Theory of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eds. Y.S. Brenner, J.P.G. Reijnders, and A.H.G.M. Spithoven, Sussex, U.K.:Wheatsheaf Books, 1988.

- Kuo, S.W.Y. *The Taiwan Economy in Trans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3.
-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March 1955):1~28.
- _____.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I,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January 1963):1~80.
- Lee, J.W. and Koo, S.M.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Equality." In *The Theory of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eds. Y.S. Brenner, J.P.G. Reijnders, and A. H.G.M. Spithoven, Sussex, U.K.:Wheatsheaf Books, 1988.
- Leontief, W. *Input-Output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Meier, G.M.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Miernyk, W.H. *The Elements of Input-Output Analysis*. New York: Random House, 1965.
- Suh, S. and Yeon, H. "Social Welfare Dur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in Korea." *KDI Working Paper 8604*, 1986.